

# 고유가 시대와 에너지 전환

##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겨울을 지나오며 '난방비 폭탄'이란 용어까지 등장할 만큼 충격적이다.

그동안 30% 내외가 인상되었고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교통비 수도세 등 공공요금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요금의 상승은 전체 물가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을 포함, 일반 가계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처럼 전 국민에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경제 불안과 에너지 물가상승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겪고 있다. 1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시작되고 러시아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부터이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의 부국으로, 2021년 기준 세계 원유와 가스 생산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자원을 팔아 국가 수입의 50%를 충당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원의 공급이 차질을 보이면서 석유 가스 등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인접 국가인 유럽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쟁 직전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은 40%, 석유는 25%였다.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

이탈리아의 의존도가 아주 높았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면 그 여파는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에너지 위기가 경제위기, 삶의 위기로 이어진 것.

전쟁 발발 1년이 다가오는데 평화로운 해결의 기미가 없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각종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안은 금년 혹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정세아래서 정부와 정치권, 정책당국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뇌해야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5월 유럽연합은 'REPower EU'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에너지 자립과 녹색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화석 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 2030년까지 제로로 갈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폭적 투자를 확대해 기존에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목표를 40%에서 45%로 확대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나 중동으로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도 극복하는 대안을 강구한 것이다. 전쟁 이후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를 견디기 위해 폐쇄 예정인 원전이나 석탄발전의 연장 가동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녹색경제와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3%로

아주 높다.

에너지 과소비 산업과 생산소비 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정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10위로 전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전력소비는 7위로, 석유 소비는 8위이다. 1인당으로 따지면 에너지 소비 4위, 전력 3위, 석유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에서 청정 재생에너지 도입은 7%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4분의 1이고 꼴찌이다. 온실가스 배출 또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상황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화석에너지를 무기화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하고 수급이 차질을 초래한다면 한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사회 구조와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에너지 위기임에도 과거에 보였던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 그리고 2030년 20%의 재생에너지 도입목표를 유럽연합이나 OECD 국가 수준인 30-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중요함을 절감해야 한다.

전환의 길이 험난한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고, 기후위기 대응의 지름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물가폭등과 고유가 시대에 서민과 소외계층에 복지 대책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社說

# 위기의 한우농, 유통구조 개선으로 넘어야

## 전남 3년간 1천여 곳 폐업

전남의 한우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한우가격이 폭락한 반면 생산비는 급등하면서 지난 3년간 1000여 곳의 영세농가가 폐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소값이 비싸서 못사고, 지금은 생산비 때문에 입식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영세농의 목소리가 가슴 아프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50마리 미만의 한 육우를 기르는 농가가 1만 3288곳에서 지난해 1만 2612곳으로 676곳(5.09%)이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2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10%가 넘는 999곳이 사라졌다. 이와 달리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가는 매년 200여 농가씩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가정식 수요 증가로 활황을 보였던 '한우 특수'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한우산업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규모로 키울수록 생산비가 낮아져 경쟁력은 올라간다. 반면

영세농가들은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영세농과 기업농이 애초 경쟁이 안된다는 얘기가. 잘못된 유통구조의 탓도 크다. 한우 값이 떨어져 수많은 농민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값이 되레 오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산지 생산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우 산업의 미래도 밝지 않다.

한우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식량안보의 중요한 대상이다. 사료부터 도축까지 농업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인구 소멸 지역인 전남의 경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전남도가 때때로 중소축산농가를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기로 했지만 그 결과는 부족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위기에 처한 한우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나 소비자가격 연동제 등도 대안일 수 있다. 농가 출하 조직을 다지고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 목포 시내버스 운행 재개, 재발 방지책 필요

## 가스비 체납 해결... 65일만

차량 연료인 가스비 체납으로 인해 두 달여간 멈춰섰던 목포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버스운행업체측이 가스비 체납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버스운행업체의 적자 운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는 임시 방편적 사태 수습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상황이다.

목포시내버스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는 13일 "14일부터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목포상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대중교통운행을 중단해 이용객들에게 교통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시내버스 운행 재개는 시내버스 회사 측에서 체납한 가스비(25억원)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면서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12일 운행중단 이후 65일만이다. 이처럼 길로 보기엔 운행 중단은 직접

적인 원인인 연료비 체납에 대해 버스운행업체의 자력 해결을 통한 운행 재개이지만 이를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운행이 중단될 소지를 안고 있어서다. 최근 연료비 급등과 이용객 감소에 따른 업체의 적자 운행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대표는 "행정 당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40~30억원의 적자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와 시의 회와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내버스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 말로 판단된다. 하지만 업체측이 획기적이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경영 개선 방안 제시없이 실호를 거둘 수 없다. 버스업체의 담보력이 바닥날 경우 목포도시가스 회사 측이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시한부 환자나 진배 없다. 이참에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버스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근본적인 시내버스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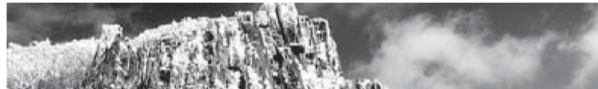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카라만 마라슈에서 식수를 얻으려는 주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옆에 줄 서 있다. 이번 강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는 시리아 포함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카라만마라슈=AP/뉴시스

## 서석대

두장의 그림이 있다. 흑백과 컬러, 채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구도와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림이다. 흑백그림에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에게 무릎을 꿇고 마실 것을 주고 있는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이 담겨있다. 다른 컬러그림에는 최근 최악의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터미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튀르키예 아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을 그린 한국인 만화가자 명민호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림과 함께 "형제나 나라 튀르키예에 깊은 애도를 그림으로나마 전한다.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 AI를 이기는 힘



건물 잔해 밖으로 나오는 등 골든타임을 훌쩍넘는 구조사령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 현장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까이 동참한 인류애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재난현장의 반대쪽에선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바로 챗GPT이다. 초거대 AI인 챗GPT의 등장으로 구글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기존 창업주들까지 소환돼 수차례 비상회의를 진행했을 정도로 챗GPT는 기업을 넘어 인류의 영역까지 장악해가는 중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이 AI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고, 기사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작곡까지 한다. 당황스럽게도 그 수준은 인간을 능가한다. 더 이상 유용한 도구로만 볼 수 없는 챗GPT를 두고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분야에서의 활용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려를 넘어 공포가 담긴 목소리다. 법이 아닌 어떤 강한 수단이 규제에 동원된다고 해도 AI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벌써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는 차기모델인 GPT-4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I와 공존해야 하는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 어떤 이는 AI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한다. 희망은 없을까. 아니다. 답은 튀르키예 재난현장에 있다. 따뜻한 심정이 없는 기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보편적 휴머니즘이 그것이다. 박상지 정치부 차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